

---

#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

## [지급결제 vision 2020]

---

2016. 1

한국은행 금융결제국



**< 요약 >**

<b>I. 수립 배경</b> .....	<b>1</b>
<b>II. 국내외 지급결제 환경 전망</b> .....	<b>2</b>
<b>III. 국내 지급결제 여건점검</b> .....	<b>8</b>
<b>IV.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</b> .....	<b>11</b>
<b>V. 추진일정</b> .....	<b>24</b>

##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

- 지급결제(Payment and Settlement)란 실물 및 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주체간 채권·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며

**지급결제제도(Payment Systems)**는 이러한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**지급수단, 참가기관, 전산시스템, 운영조직, 업무처리 규정 등으로 구성됨**

-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제도의 근간을 이룰 뿐만아니라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**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**

- **한국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**

- 첫째, 금융기관 등이 **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상호간 또는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 등과 자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**
- 둘째,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시스템인 **한은금융망(BOK-Wire)을 운영**
- 셋째,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**일중 결제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최종대부자(lender of last resort) 역할을 수행**
- 넷째,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**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, 평가 및 개선권고 등 감시(oversight) 업무를 수행**
- 다섯째, **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고 민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촉진**

## < 요약 >

### I 수립 배경

- 핀테크 확산, 금융소비자의 행태변화 등에 따라 **혁신적 지급서비스**가 확산되고 금융위기 이후 **새로운 지급결제 규제 체계**가 형성되는 등 **지급결제의 패러다임이 변화**하고 있음
  -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결제체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**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(vision)**을 제시하고 이를 **일관되게 추진**할 필요가 있음
- ⇒ 2020년을 목표로 한 「**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**」(지급결제 vision 2020)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

### II 국내외 지급결제 환경 전망

#### 1 IT·금융 융합 가속화에 따른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

- ① 각종 플랫폼 사업자, 통신사, 스마트폰 제조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**비금융기업의 시장진입이 확대**
- ② **블록체인**과 **분산원장 기술**에 기반을 둔 **비트코인** 등 **다양한 디지털 통화**(또는 가상통화)가 등장
- ③ 금융소비자의 **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기대**가 커지고 이에 부응하는 **혁신적 지급서비스가 등장**
- ④ 개방형 네트워크와 간편결제를 지향하는 지급결제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**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가 증대**

## 2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성 강화 요구 및 시스템간 연계 확대

- 1 안정성이 강화된 금융시장인프라 국제기준(PFMI;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)에 대한 국가별 도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국가들은 금융거래 전문 국제표준,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각종 식별코드를 도입
- 2 주요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등 중요 시스템을 개선중이거나 재구축을 추진·완료
- 3 ASEAN+3 증권결제인프라 연계 방식에 의한 증권 및 외환결제가 추진되고 역내 소액결제망 허브를 통한 다자간 시스템 연계도 본격화
- 4 위안화 거래 및 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위안화의 청산·결제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증대

## 3 중앙은행 역할 강화 요구

- 1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지급결제제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증
- 2 새로운 형태의 결제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요구가 증대
- 3 국제기준(PFMI) 도입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 확대
- 4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(CPMI;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) 등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의 역할이 강화된 가운데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제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
# III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

## 1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

□ “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도모”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3대 전략목표를 마련

- ◎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
- ◎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
- ◎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

□ 3대 발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할 12개 중점과제를 선정

###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

**비전**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도모

전략 목표	I.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	II.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	III.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
중점 추진 과제	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②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③ 위안화 청산결제 인프라 고도화 ④ 금융시장인프라의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	수 소액지급서비스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⑥ 디지털 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⑦ 차액결제 주기 단축 ⑧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혁신 촉진	⑨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리스크분석 체계 고도화 ⑩ 금융정보화 사업 확대 ⑪ 지급결제분야 국제협력 강화 ⑫ 지급결제 조사연구 및 정책기능 확충

## 2 중점 추진과제

### 1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

- ◆ **한은금융망**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**국외 인프라와의 연계 기반**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최신 IT 기술 도입을 통한 **시스템의 전면 재구축**을 추진
  - － ① 현행 제도, 업무체계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한은금융망 재구축 방안을 마련(2015~2017)한 후 ② 전산시스템 개발(2018~2020)을 추진

### 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

- ◆ **글로벌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 확장,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 완화, 소액결제망을 통한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으로의 전환을 통한 결제리스크 감축** 등을 위해 **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**을 추진
  - － 민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

####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

한국	미국	유럽연합	일본 <sup>1)</sup>
09:00~17:30 (8시간 30분)	21:00~익일 18:00 (21시간 30분)	19:30~익일 19:00 (23시간 30분)	08:30~19:00 (10시간 30분)

주 : 1) 2016년 2.15일부터는 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

### 3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

- ◆ 위안화 결제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**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원**하기 위해 위안화 **청산·결제인프라의 고도화**를 추진
  - － ① 청산시스템 안정화 도모, ② 원/위안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, ③ 이중통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 등 단계별로 추진하되 추진 일정은 거래규모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여 적의 수립

#### 4 금융시장인프라의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

- ◆ 금융시장인프라(FMI;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)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**국제적 점검**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PFMI 등 **국제기준의 국내 도입을 조기에 달성**하도록 지원
  - 자금 및 증권의 청산·결제인프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기준의 수용·정착을 유도하고 국내 FMI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 개선<sup>2</sup>을 지속 추진
    - 비상상황에 대비한 FMI의 손실복구 및 관리체계 정비, 글로벌 법인식별코드(LEI; Legal Entity Identifier) 시스템 국내도입,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체계 확립 등
  - 이를 위해 국내외 FMI 관계당국간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

#### 5 소액지급서비스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

- ◆ 소액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**소액결제제도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**
  - 지급결제 환경변화 수용, 새로운 지급서비스기관의 시스템 참여 지원,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의 자금이체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
  - 혁신적 전자지급서비스의 잠재리스크 파악 및 예방을 위한 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보안대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지속 추진

#### 6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

- ◆ **디지털통화·분산원장 기술의 활용**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**연구를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**
  - 글로벌 거래 및 활용 동향 상시 점검, 분산원장 기술 개발·활용, 최적 규제방안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시수단을 확보

## 7 차액결제 주기 단축

- ◆ 현재 추진중인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간 연계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차액결제시점을 조기화(익일→당일) 또는 차액결제를 일중 여러 차례 실시하여 결제리스크 노출시간 및 규모를 감축
  -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

### 주요국의 고객간 자금이체의 리스크노출 시간

	호주, 스웨덴	영국	남아공	싱가포르	한국
차액결제시점	실시간	영업일 3회 (07:00 13:05, 15:45)	영업일 매시간마다	영업일 2회 (12:00, 20:00)	익영업일 1회 (11:00)
시스템 운영시간	24시간	24시간	24시간	24시간	24시간
리스크 노출시간 <sup>1)</sup>	0시간	15시간 15분	1시간	16시간	35시간

주 : 1) 영업일중 최대노출시간 기준

## 8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혁신 촉진

- ◆ 지급결제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
  -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과 혁신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당국앞 제안
  - 소액결제시스템 이용방식 개선 및 금융거래 전문 국제표준 도입 등 추진

## 9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리스크분석 체계 고도화

- ◆ PFMI 등 국제기준 정착과 지급결제혁신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감시업무를 고도화
  -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수행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을 추진
  - 결제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추가 개발, 리스크의 정량화 등 정책수단 확충을 통해 감시업무의 고도화를 추진

## **10 금융정보화 사업 확대**

- ◆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제공 확산 등에 대응하여 **금융정보화 사업의 범위를 확대**하고 **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<sup>1</sup>의 운영방식을 개선**
  - 금융정보화 공동사업 및 표준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기관 협의체(의장: 한국은행 부총재)로 금융기관, 유관기관 등 28개 기관으로 구성
- 국내 금융권의 재해복구시스템 현황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
-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가기관을 비금융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사업 발굴 및 제안을 비금융기관 및 일반인까지 확대 시행

## **11 지급결제분야 국제협력 강화**

- ◆ **글로벌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**하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**정책수립 및 운영경험을 개도국 중앙은행에 전수**
  -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및 소액결제망 허브를 통한 다자간 시스템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
  - 개도국 중앙은행에 대해 지급결제제도 설계, 법규정비, 감시체계 수립 및 인프라 구축관련 정책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

## **12 지급결제 조사연구 및 정책기능 확충**

- ◆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**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**을 선도하기 위한 **조사연구를 강화**하는 한편, 자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대정부 정책방안 제시 등 **정책기능을 확충**
  - 디지털 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,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, 동전없는 사회(coinless society)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
  - 지급결제 외부전문가 토론회,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「지급결제보고서」의 정책기능 부문을 확충

**IV**

**추진일정**

전략목표 / 중점추진과제 / 세부과제	추진연도				
	16	17	18	19	20
<b>I.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</b>					
<b>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</b>					
①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안					
② 전산시스템 개발 및 가동					
<b>②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</b>					
① 운영시간 연장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의					
② 운영시간 연장 시행					
<b>③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</b>					
① 청산시스템 안정화 도모					
② 동시결제시스템 구축(필요시)					
③ 이종통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(장기과제)					
<b>④ 금융시장인프라의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</b>					
① 국제기준 이행 유도 및 제도 개선(지속)					
② 관계당국과 협의체 구축 추진					
<b>II.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</b>					
<b>⑤ 소액지급서비스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</b>					
① 소액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방안					
②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방안					
③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(지속)					
<b>⑥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</b>					
①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(지속)					
② 관련 감시수단 마련					
<b>⑦ 차액결제 주기 단축</b>					
① 주기 단축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의					
② 주기 단축 시행					
<b>⑧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혁신 촉진</b>					
<b>III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</b>					
<b>⑨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리스크분석 체계 고도화</b>					
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 개선방안					
② 리스크의 정량화 등을 통한 감시업무 고도화 추진					
<b>⑩ 금융정보화 사업 확대(지속)</b>					
<b>⑪ 지급결제분야 국제협력 강화(지속)</b>					
<b>⑫ 지급결제 조사연구 및 정책기능 확충(지속)</b>					

## 주요 지급결제 용어 해설

- **지급결제제도(Payment Systems)**: 개인, 기업,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<sup>■</sup>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, 참여기관, 관련 법규,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인프라 등으로 구성
  -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·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
- **금융시장인프라(FMI;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)**: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,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하며,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(PS; Payment System), 중앙거래당사자(CCP; Central Counterparty), 중앙예탁기관(CSD;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), 증권결제시스템(SSS; Securities Settlement System), 거래정보저장소(TR; Trade Repository) 등을 포괄
- **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(PFMI;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)**: 국제기구인 CPMI와 IOSCO가 공동으로 제정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으로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(principles) 및 규제.감독.감시당국의 5대 책무(responsibilities)로 구성
- **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(CPMI;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)**: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관련한 정책 개발,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등을 위해 BIS 산하에 23개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기구(설립 1990년, 한국 2009년 가입)
- **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;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)**: 증권관련 국제규범 형성, 정보교환,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를 위해 100여 개국의 증권감독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(설립 1983년, 한국 1984년 가입)
- **자금결제시스템(PS; Payment System)**: 참가기관들간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처리절차,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로서 거액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액결제시스템(Large-Value Payment System)과 소액자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소액결제시스템(Retail Payment System)으로 구분

- **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**(RTGS; Real-Time Gross Settlement System):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총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적용
- **외환결제시스템** : 거래당사자들이 매입·매도 통화를 서로 수취·지급함으로써 외환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채권·채무관계를 종결시켜주는 금융시장인프라
- **외환동시결제**(PvP; Payment versus Payment): 외환의 지급 및 수취 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결제방식
- **증권결제시스템**(SSS; Securities Settlement System): 증권이 거래된 이후 증권을 인수도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여 거래를 완결시키는 금융시장인프라
- **증권·대금동시결제**(DvP; Delivery versus Payment):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계좌대체시스템과 자금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
- **중앙거래당사자**(CCP; Central Counterparty):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이 되고 모든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됨으로써 미결제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금융시장인프라
- **중앙예탁기관**(CSD;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):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을 위한 증권이전을 실물증권이 아닌 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대체(book-entry)에 의해 처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
- **거래정보저장소**(TR; Trade Repository): 2009년 G20 정상회의 시 합의에 따라 거래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인프라
- **업무지속계획**(BCP; Business Continuity Plan): 내부장애가 발생하거나 외부재해 등이 있을 경우 사전 합의된 수준으로 업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목표로 하는 대책

## 수립 배경

- 핀테크 확산, 금융소비자의 행태변화 등에 따라 혁신적 지급서비스가 확산되고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지급결제 규제 체계가 형성되는 등 지급결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
    - IT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서비스 시장에 변혁이 초래되는 가운데 간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금융보안에 대한 우려도 증대
    -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는 한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논의도 진전
  - 지급결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(vision)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    - 주요국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와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「지급결제제도 장기 발전전략」을 수립하여 추진중
- ⇒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·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한 「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」(지급결제 vision 2020)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

## 1 IT·금융 융합 가속화에 따른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

## &lt; 여건 변화 &gt;

- ◆ 지급서비스의 유비쿼터스(ubiquitous)를 가능케 하는 **IT기술의 발전이 지속될** 전망
  -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, 스마트폰, 근거리무선통신기술(NFC) 등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
  - 점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인증(biometric authentication), 위치인식(location-aware) 등 다수의 신기술이 지급결제에 활용될 전망
- ◆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**IT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급격히 확대**할 전망

## ①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확대

- 각종 플랫폼 사업자, 통신사, 스마트폰 제조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**비금융기업의 시장진입이 확대**될 것으로 예상
  - 지급서비스 시장은 기존 금융권의 폐쇄형 지급결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IT기업의 개방형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 양분 가능
  - IT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서비스 개발을 촉진

## ② 디지털 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의 등장 및 확산

- **블록체인**과 **분산원장** 기술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 등 **다양한 디지털 통화**(또는 가상통화)가 **등장**할 것으로 예상
  - 분산원장(distributed ledgers)이란 네트워크상 분산된 온라인 거래장부를 의미하며 동 환경에서는 거래장부가 모든 네트워크 참가자에 공유·관리됨
- 디지털 통화 이용의 확산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

## ③ 지급서비스의 편의성 제고

- 금융소비자의 **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기대**가 커지고 이에 부응하는 **혁신적 지급서비스가 등장**하고 있음
- 지급서비스의 종류 및 접점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시간·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
- 국가간 소액결제망 연계를 통한 지급서비스의 글로벌화도 진행

## ④ 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 증대

- 개방형 네트워크와 간편결제를 지향하는 지급결제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**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**가 커질 것으로 예상
- 해킹, 도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손실 등으로 금융정보 보호 및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가 증대
- 신규 IT기술이 단기간에 금융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금융거래의 신뢰성 및 보안성에 대한 검증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전자금융 사고도 빈번해질 가능성

## 2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성 강화 요구 및 시스템간 연계 확대

### < 여건 변화 >

- ◆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각종 국제기준 강화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**각국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중**
  - 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(PFMI;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)” 도입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·결제·보고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code 체계 및 메시지 전송포맷 표준화가 진행
- ◆ 오래된(legacy) 중요 **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 또는 재구축**을 추진
- ◆ 국가간 경제교류 확대, 글로벌 금융시장 성장, 국제표준 도입 및 시스템 개선 등으로 **국가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가 보다 확대되고 상호의존성도 증대**

### ①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도입

- 국제기준(PFMI)에 대한 국가별 도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**국가간 규제차익 제거, 공정경쟁 여건 조성**을 위한 **논의도 활발**
  - 당분간은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각국의 제도 정비 노력 지속
  - 국제기준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
- 상당수 국가들은 **금융거래 전문 국제표준(ISO 20022)**,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**각종 식별코드**(법인, 상품, 거래유형)를 **도입**할 것으로 예상

### ② Legacy 시스템의 개선 또는 재구축

- 주요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등 **legacy 시스템**을 **개선중이거나 재구축**을 추진·완료할 것으로 예상

-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재구축시 국제적 표준을 수용하고 back-up 또는 대체결제시스템 구축도 병행

### ③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른 지급결제인프라간 연계 확대

— ASEAN+3 증권결제인프라(RSI;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) 연계 방식에 의한 증권 및 외환결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

- 당분간은 단기모델로 채택된 중앙예탁기관(CSD<sup>1)</sup>-실시간거액결제시스템(RTGS<sup>2)</sup>) 연계모델 구현을 위한 논의 및 시스템 구축 추진

-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(국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)
- Real-Time Gross Settlement System(국내에서는 한은금융망)

— 역내 소액결제망 허브(APN hub)<sup>3</sup>를 통한 다자간 시스템 연계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

- ASEAN+3 회원국가의 민간 소액결제제도 운영기관 협의체(Asian Payment Network, APN)에서 중장기 과제로 역내 허브 구축을 추진중

### ④ 국제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사용 확대

— 위안화 거래 및 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위안화의 청산·결제인프라 확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

- 당분간은 국내에서 원/위안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고도화가 진행

- 중국이 추진중인 국제위안화결제시스템(CIPS; China International Payment System) 구축 형태, 위안화의 CLS<sup>4</sup> 결제통화 지정 및 중국과의 CSD-RTGS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위안화 결제방식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

- 외환동시결제의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CLS(Continuous Linked Settlement) 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

### 3 중앙은행 역할 강화 요구

#### < 여건 변화 >

- ◆ 새로이 제정된 PFMI에서는 지급결제에 대한 중앙은행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
- ◆ 핀테크 확산, 혁신적 전자지급서비스 출현 등으로 지급결제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가 증대될 전망

#### 1 지급결제혁신 촉진자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

- 최근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
  - 핀테크산업 발전 지원, 소액결제서비스 편의성 제고, 안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관심 증대
- 지급결제제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재자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
  -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참여 확대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및 운영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 대두

####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

- 새로운 형태의 결제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
  - 국내외 지급결제인프라간 상호연계성 확대 및 결제 메커니즘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결제리스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시체계 고도화가 필요

-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업 등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과는 다른 형태의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어 그에 맞는 감시 방법을 마련할 필요

### ③ 정책당국으로서의 역할

- 국제기준 도입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위해 **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 확대**

### ④ 국제협약체 일원으로서의 역할

-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(CPMI;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) 등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의 역할이 강화된 가운데 **지급결제 환경변화**에 대응한 **정책과제 제시**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- 중앙은행은 국제기구 회원으로서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해당국의 정책 수립·집행시 논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
- **개도국의 지급결제인프라 현대화 사업**에 대한 **선진국의 지원**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개도국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제도 설계, 감시체계 수립 및 지급결제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선진국 중앙은행의 지원을 요청

## 1 지급결제 및 서비스 시장 변화

- 국내 지급결제부문은 80년대 후반에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금융결제원의 **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**해 왔음
  - 그동안 비은행금융기업의 금융공동망 참여가 확대되고 비금융기업도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관련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
- **최근**에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결제 인증체계 간소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로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한 **핀테크산업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**되고 있음
  - 이와 함께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
-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체와 ICT기업 등 **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**이 급격히 확대됨
  - 다수의 비금융기업이 경쟁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
  - 관련 논의 또는 혁신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규제 완화 등에 치우치고 있어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

## 2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

- 현재 국내 금융시장인프라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**자금결제시스템(PS<sup>1</sup>)**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의 **증권청산결제시스템(CCP/CSD/SSS<sup>2</sup>)**이 주축임
  - Payment System    ■■ Central CounterParty,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, Securities Settlement System
- 장외파생거래 관련 정보의 집중·관리·분석을 담당할 거래정보 저장소(TR ; Trade Repository)는 2016년을 목표로 한국거래소가 구축중
- 이들 인프라(FMI)에 대한 **PFMI 충족 여부를 점검(gap analysis)**한 결과, **상당 부분 충족**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감안한 재무자원 필요금액 산정, FMI의 금융안정 지원,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운영리스크 관리, 재해발생시 업무복구 목표시간 등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
- **한은금융망**은 1994년 구축 이후 20여년간 지속된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 복잡화,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**시스템 개선 또는 재구축이 필요함**
- **소액결제서비스 체계**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 출현, 분산원장 기술 도입·확산 등 **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할 필요**가 있음
- **증권청산결제인프라**의 경우 CCP의 주요국 동등성 평가 완료 등으로 국제적인 인증절차는 완료되었으나 **리스크관리 장치 보완** 등이 필요한 상황임

### 3 중앙은행 역할 강화 필요

- 한국은행은 **한은금융망 운영, 지급결제제도 감시** 및 지급결제 혁신 지원 등 **발전촉진 역할**을 수행하고 있음
  -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형태의 다양화·복잡화, 거래규모의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**한은금융망의 수용성을 대폭 확장**할 필요
  - **새로운 지급서비스 등의 확산**에 따른 결제구조의 다단계화·복잡화에 대응하여 관련 잠재리스크를 포착, 분석·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 **감시 역할을 강화**할 필요
  - 최종대부자 및 감시당국으로서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제제도와 지급수단의 도입, 기존 제도의 개선 등 **지급결제제도의 발전 촉진**을 주도할 필요
    - 포럼·세미나·컨퍼런스 개최, 정부 T/F 참여 등을 통해 감독당국 및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내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정책방안을 제시
- CPMI, 동아시아·태평양 중앙은행기구(EMEAP<sup>\*)</sup>, 동남아시아 중앙은행기구(SEACEN<sup>\*\*</sup>), CLS감시위원회 회원으로서 **글로벌 규제 논의 및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적극 참여**하여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  - Executives'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
  -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
- 아울러 개도국 지급결제 현대화 지원 및 국가간 소액결제망 연계 사업 등을 주도

## IV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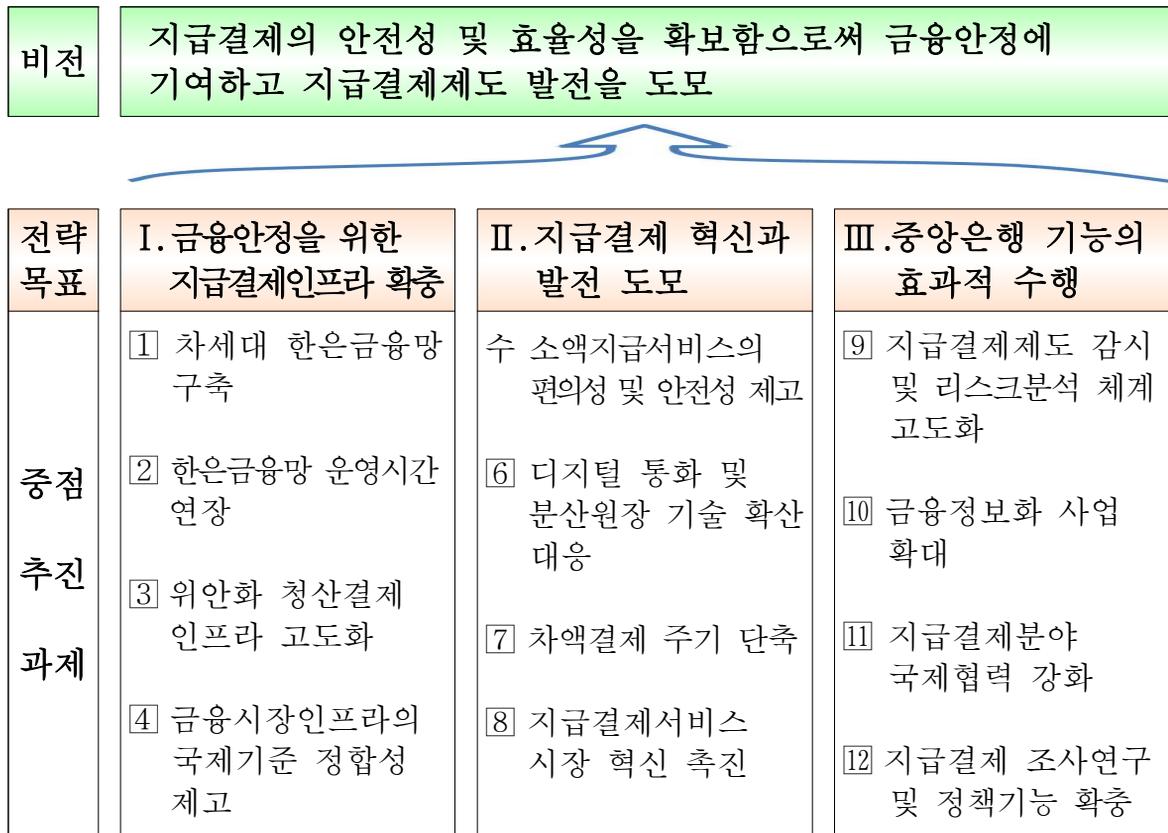
### 1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

□ “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도모”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3대 전략목표를 마련

-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
-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
-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

□ 3대 발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할 12개 중점과제를 선정

####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



## 2 중점 추진과제

### 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

◆ **한은금융망**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최신 IT 기술 도입을 통한 **시스템의 전면 재구축**을 추진

- 참가기관의 **이용 편의성을 제고**하는 한편 역내 금융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**국외 인프라와의 연계 기반**을 확보

□ 「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기본계획」에 따라 **업무개선방안**을 마련한 후 및 **전산시스템 개발**에 착수하는 등 **2단계로 나누어 추진** (2015~2020년 예정)

- **(1단계<2015~2017년> :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)** 현행 제도, 업무체계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

- 유관부서 및 주요 참가기관 등 금융시장의 의견을 수렴, 반영하고 현행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

- **(2단계<2018~2020년> : 전산시스템 개발)**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안을 토대로 전산시스템을 개발

-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신규 개발된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맞춰 개편토록 한 후 종합 테스트를 실시

□ 한편 한은금융망 재구축시 **거액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**

-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(16:00~17:30) 결제집중 완화, 일중유동성 지원제도 개선, 유동성절약형 결제 방식 개선 등

## ②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

◆ 글로벌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 확장,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 완화, 소액결제망을 통한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으로의 전환을 통한 결제리스크 감축 등을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

- 현재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은 8시간 30분(일반자금거래 기준, 09:00~17:30)으로 주요국 실시간거액결제(RTGS) 시스템 운영시간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수준
  - 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해 시차없는 결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긴 운영시간을 유지하거나 최근에 연장<sup>■</sup>
    - 최근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있음

###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

미국	영국	스위스	유럽연합	홍콩	일본 <sup>1)</sup>
21:00~ 익일 18:00	06:00~ 16:20	17:00~ 익일 16:30	19:30~ 익일 19:00	08:30~ 19:30	08:30~ 19:00

주 : 1) 2015년 10.13일 New BOJ-NET을 전면 가동하면서 운영시간을 30분 연장하였고 2016년 2.15일부터는 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

-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연장은 참가기관 편의 증대, 국가간 연계 기반 강화 및 결제리스크 감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
-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의 연장 여부는 한국은행 뿐만아니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

### ③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

◆ 위안화 거래 및 결제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**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원**하기 위해 위안화 **청산·결제인프라의 고도화**를 추진

□ 청산은행 시스템의 **안정적 운영기반**을 확고히 한 후 청산결제인프라 구축을 **단계적으로 추진**

－ **(1단계 : 청산시스템 안정화 도모)** 금융기관의 청산은행 주계좌 이용 독려, 업무처리방식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,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청산시스템의 안정화 도모(2016년)

－ **(2단계 : 원/위안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)** 결제시점 차이에 따른 리스크 제거를 위해 원-위안화 동시결제(PvP)시스템<sup>■</sup> 구축 (2016년 이후)

■ 한은금융망과 위안화청산시스템을 연계(위안화 결제공동망을 통한 간접 연계 등)하여 원화 및 위안화 자금이체를 동시에 실행

－ **(3단계 : 이종통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)** 위안화표시 채권의 원화 결제 또는 원화표시 채권의 위안화 결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종통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(장기과제)

□ 동시결제시스템 구축 **추진일정은** 위안화 **거래규모** 증가 속도, **글로벌 위안화 결제인프라** 구축 형태<sup>■</sup> 등을 감안하여 **적의 수립 추진**

■ 중국의 국제위안화결제시스템(CIPS)의 역외 참가기관 허용, 위안화의 CLS 결제통화 지정 또는 중국과의 CSD-RTGS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청산은행을 배제한 인프라 고도화가 가능

#### 4 금융시장인프라의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

◆ 국내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적 점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PFMI 등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지원

□ 자금 및 증권의 청산·결제인프라가 국내외 금융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기준의 수용·정착을 유도

– 국내 FMI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적 점검에 대응하여 운영기관 평가시 국내 중앙거래당사자(CCP; Central Counterparty)의 복원력(resilience) 및 회생능력(recovery)을 제고하도록 권고

– 국내 자금 및 청산·결제 시장관행 파악을 통해 바람직한 청산·결제업무 관행의 정착을 제안

□ 국내 FMI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

– 비상상황에 대비한 FMI의 손실복구 및 관리체계 정비, 글로벌 법인식별코드(LEI; Legal Entity Identifier) 시스템 국내도입,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체계 확립 등

□ 국내외 FMI 관계당국간 협조체계를 구축

– CPMI-IOSCO 및 IMF 등의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제도화

– 복수 국가와 관련된 FMI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중앙은행,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감시체계를 강화

## 수 소액지급서비스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

◆ 최근의 소액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**소액결제제도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**하여 추진

□ 글로벌 지급결제 트렌드,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제도 및 운영방식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국내 **소액결제제도 편의성 제고**를 **지속 추진**

—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, 주요국의 대응전략, 소비자의 소액결제 행태 변화 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급결제 환경변화 수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

— 새로운 지급서비스기관의 시스템 참여 및 발전 지원,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의 자금이체 소요시간 단축 등 지급서비스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

□ **혁신적 전자지급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** 확보를 위한 **정책과제**를 지속적으로 **추진**

— 잠재리스크 파악 및 예방을 위한 통계확충 및 감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전자금융 보안대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

□ **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** 및 다양한 **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** 방안 **확충**

—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와의 공동연구, 운영기관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관련 논의를 지속

## ⑥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

◆ 디지털통화·분산원장 기술의 활용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를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

### □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관련 모니터링 및 연구 수행

- 디지털통화의 글로벌 거래 및 활용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분산원장 기술 개발·활용 방안 등에 대해 공동연구 수행
- 디지털통화 확산이 지급결제 뿐만아니라 통화정책, 금융안정,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행·유통에 관한 최적의 규제방안을 검토

### □ 디지털통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

- 디지털통화는 지역적 제한없이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기구 논의(CPMI 디지털통화 전문가그룹 등)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 중앙은행과 협력을 강화

### □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적절한 감시수단 확보

-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및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주요 디지털통화 서비스업체에 대한 자료요구권, 통계조사권 등 감시수단을 확보

## 7 차액결제 주기 단축

◆ 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이용 편의성 및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나 최종결제가 익일에 이루어져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액결제 시점을 단축

□ 국내 주요 금융공동망은 지급지시가 있을시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데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

— 다만 최종결제가 익영업일에 한차례만 실시(차액결제)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신용리스크에 노출

### 주요국의 고객간 자금이체의 리스크노출 시간

	호주, 스웨덴	영국	남아공	싱가포르	한국
차액결제시점	실시간	영업일 3회 (07:00 13:05, 15:45)	영업일 매시간마다	영업일 2회 (12:00, 20:00)	익영업일 1회 (11:00)
시스템 운영시간	24시간	24시간	24시간	24시간	24시간
리스크 노출시간 <sup>1)</sup>	0시간	15시간 15분	1시간	16시간	35시간

주 : 1) 영업일중 최대노출시간 기준

□ 현재 추진중인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간 연계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차액결제시점을 조기화 또는 차액결제를 일중 여러 차례 실시하여 결제리스크 노출시간 및 규모를 감축

— 차액결제시스템의 결제주기 단축은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

□ 동 방안이 실시될 경우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납입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

## ⑧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혁신 촉진

◆ 지급결제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액결제시스템 이용방식 개선을 추진

□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과 혁신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당국앞 제안

—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과 재무건전성 및 인적·물적 요건 등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

— 예측가능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내용을 구체화·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

□ 소액결제시스템 이용방식 개선 및 금융거래 전문 국제표준(ISO 20022) 도입 등 추진

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등을 이용한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결제시스템 간접이용을 지원

— 소액결제 혁신 및 금융보안 강화 등을 위한 국제논의(CPMI, ISO/TC68 등)에도 적극 참여

## ⑨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리스크분석 체계 고도화

◇ PFMI 등 국제기준 정착과 지급결제혁신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감시업무를 고도화

□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수행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추진

－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·감독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개선과제를 단계별로 추진

▪ 감시업무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감시보고서 발간, 중요 FMI 정기 평가시 외부전문가 평가 병행 실시 등

□ 리스크의 정량화 등을 통해 감시업무의 고도화 추진

－ 금융기관의 결제행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동성지표 등을 추가로 개발하고 FMI의 신용 및 유동성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스트레스 모형 등을 구축

□ 지급결제통계 분석을 강화

－ 대용량 지급결제 통계와 주요 경제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통계·조사를 확충

## 10 금융정보화 사업 확대

◆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제공 확산 등에 대응하여 **금융정보화 사업의 범위를 확대**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**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**의 운영방식을 개선

- 금융정보화 공동사업 및 표준화, 안전대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에 의거 설치된 금융기관협의회(의장: 한국은행 부총재)로 은행, 증권사, 카드사, 보험사, 유관기관 등 28개 기관으로 구성

□ 표준화 및 안전대책 관련 **금융정보화 사업 확대** 추진

- 국내 금융권의 재해복구시스템 현황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

□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가기관을 비금융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**공동사업 발굴 및 제안을 비금융기관 및 일반인까지 확대** 시행

-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, 표준화, 안전대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전자금융업자, IT기업 등 비금융기관까지 확대
- 공동사업 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기관을 비금융기관 등 유관업체까지 확대하고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‘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’에 금융정보화 필요사항 항목을 추가

□ 각종 위원회(표준화위원회, 안전대책위원회 등)의 **안전 제안기관을 다변화**

- 금융결제원 이외에 금융보안원, 한국예탁결제원, 코스콤, 스타트업 등에서도 안전을 제안하도록 적극 독려

## 11 지급결제분야 국제협력 강화

◇ 국제기구의 글로벌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당행의 지급결제제도 정책수립 및 운영경험을 개도국 중앙은행에 전수

□ 국제기구(CPMI, EMEAP, SEACEN, ASEAN+3 등)의 글로벌 이슈 및 역내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등에 적극 참여

— ASEAN+3 증권결제인프라(RSI;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) 연계 논의 등 국제기구 워킹그룹 및 Task Force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

— 아시아 역내 소액결제망 허브(APN hub)를 통한 다자간 시스템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함과 아울러 국가간 공동망(ATM 및 송금) 사업<sup>2</sup>의 활성화 도모

■ 2010.12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미국, 필리핀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 6개국과 연계하여 ATM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.12월부터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송금서비스를 시범 제공중

□ 개도국 중앙은행에 대해 지급결제제도 설계, 법규정비, 감시체계 수립 및 인프라 구축관련 정책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

— 한국형 지급결제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

## 12 지급결제 조사연구 및 정책기능 확충

◇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**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**을 선도하기 위한 **조사연구를 강화**하는 한편, 자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대정부 정책방안 제시 등 **정책기능을 확충**

□ 급변하는 대내외 지급결제여건의 변화 추이를 신속·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 **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노력 강화**

－ 디지털 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등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 및 빅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의 등장 및 확산, 소액결제와 관련한 전자화폐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중점

－ 선진국의 현금없는 사회(cashless society) 모델을 연구하여 동전없는 사회(예: coinless society)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

□ 자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대정부 정책방안 제시 등을 통해 **지급결제 정책기능을 확충**

－ 관계당국과 지급결제 관련 협의체 마련, 유관기관 공동 정책세미나, 지급결제 외부전문가 토론회,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

－ 우리나라 지급결제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「지급결제보고서」의 정책기능 부문을 확충

전략목표 / 중점추진과제 / 세부과제	추진연도				
	16	17	18	19	20
<b>I.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</b>					
<b>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</b>					
①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안					
② 전산시스템 개발					
③ 테스트 실시 및 시스템 가동(2020년말)					
<b>②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</b>					
① 운영시간 연장 방안					
②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의					
③ 운영시간 연장 시행					
<b>③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</b>					
① 청산시스템 안정화 도모					
② 동시결제시스템 구축(필요시)					
③ 이종통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(장기과제)					
<b>④ 금융시장인프라의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</b>					
① 청산·결제인프라의 리스크관리 국제기준 이행 유도					
② 국내 FMI 제도 개선 추진(관계당국 공동)					
③ 관계당국과 협의체 구축 추진					
<b>II.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</b>					
<b>⑤ 소액지급서비스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</b>					
① 소액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방안					
②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방안					
③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(지속)					
<b>⑥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</b>					
① 관련 모니터링 및 연구 수행(지속)					
② 관련 국제논의 참여 및 외국 중앙은행과 협력 강화(지속)					
③ 관련 감시수단 마련					
<b>⑦ 차액결제 주기 단축</b>					
① 차액결제 주기 단축 방안					
②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의					
③ 차액결제 주기 단축 시행					
<b>⑧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혁신 촉진</b>					

전략목표 / 중점추진과제 / 세부과제	추진연도				
	16	17	18	19	20
<b>Ⅲ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</b>					
<b>9]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리스크분석 체계 고도화</b>					
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 개선방안					
② 리스크의 정량화를 통한 감시업무 고도화 추진					
③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통계·조사 확충					
<b>10] 금융정보화 사업 확대</b>					
① 금융정보화 사업 확대 추진(지속)					
②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공동사업 발굴 및 참여기관 확대					
③ 각종 위원회(표준화위원회 등) 안건 제안기관 다변화					
<b>11] 지급결제분야 국제협력 강화</b>					
① 국제기구의 글로벌 이슈 논의 참여 및 개도국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자문 제공(지속)					
② 한국형 지급결제시스템 지원방안					
③ RSI 등을 통한 다자간 시스템 연계 논의 대응					
<b>12] 지급결제 조사연구 및 정책기능 확충(지속)</b>					
①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					
② 한국은행 지급결제업무의 정책기능 확충					